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4호

2027년 1월 16일까지 3년 동안 활동할 것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전 수영연맹 부회장 선임

김경윤 연합뉴스기자

예산 부족 등 이유 모델에 학생 숙박시켜

인권위 "주요 스포츠 대회 시설 불충분...폭력은 개선"

임철휘 뉴시스기자

[김현수칼럼]

최속헌법에도 난감한 '나 좀 살려주세요!'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정규 교과목 외 체육 종목을 교습하는 학원은 관리 사각지대

"학원 아닌가요"...사각지대 속 신생 체육시설, 관리누가해나

이지현, 김지성 머니투데이기자

경찰 "계속된 출석 지연 고려 출국금지 결정"

'출국금지' 황의조, 경찰에 분노 "부당한 과잉 수사로 3억 피해"

이미나 한국경제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전 수영연맹 부회장 선임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장에 아티스틱스위밍 선수 출신 박지영(53) 전 대한수영연맹 부회장이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박지영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박 이사장은 2027년 1월 16일까지 3년 동안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아티스틱스위밍 1세대 선수 출신으로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 국제수영연맹 아티스틱스위밍 국제심판, 아시아수영연맹 기술위원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이화여대 체육학과 졸업 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 한국체대 체육학과 박사 과정을 거쳤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0월 이은정 전 이사장 퇴임 후 약 3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인권위 "주요 스포츠 대회 시설 불충분... 폭력은 개선"

지난해 열린 주요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신체·언어 폭력 등은 개선됐으나, 선수들을 위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전국체육대회(5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4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종목대회(2개 종목)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선수·지도자 44명을 심층면담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인권위 모니터링은 경기 중 지도자·관중 등의 언어·신체·성폭력 발생 사례 유무 및 대응체계, 탈의실·대기실·연습공간 등 경기장 내외 시설 및 환경,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정보접근권, 부상 발생 대비 의료체계 및 안전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언어·신체적 폭력이나 접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담과 구제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신고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대회가 진행된 14개 경기장 가운데 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원이 상주하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대기실·연습실·탈의실 등 시설은 일부 갖추어져 있었으나, 여전히 충분하지 못했다. 일부 학생 선수들은 대회 개최 지역에 유스호스텔이 없고 호텔 이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텔 등에 숙박 시설을 배정받기도 했다.

모든 경기장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다. 일부 경기장에는 수어 통역도 배치되어 있었으나 점자 자료, 확대경 등 장애인 정보접근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해 전이었던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모든 경기장에 의료진과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었다.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처치를 했고, 필요한 경우 병원 이송 등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의료진이 없는 경기장이 1개, 구급차가 없는 경우가 7개 종목, 부상 선수에 대한 응급조치가 없었던 경기장도 2개나 있었다.

인권위는 "올해도 주요 경기대회의 인권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기존의 점검 사항 외에도 대회 준비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인권 보호 체계와 시설 환경을 점검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칼럼] 최속현법에도 난감한 '나 좀 살려주세요!'

체육계에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육인들만의 구제기관이 있다. 트라이애슬론 故 최속현 선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후, 일명 '최속현법'에 근거해 설립한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가 그것이다. 당시 체육계에 구제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던가, 정부는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부산을 떨었다.

바람 잘 날 없는 윤리센터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세 번째 이사장이 취임한 오늘, 만약 나에게 또 다른 최속현이 찾아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참 난감할 것 같다. 인권침해 구제는 늘 일관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임에도 피해자의 마음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세심함이 필요한데, 윤리센터는 아직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리센터에 의한 이런 '난감함'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졸속 출범으로 인해 조직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탓이 크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을 통해 징계를 요청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고, 징계요청을 받은 체육단체들은 법인으로서 자치권을 갖고 있어 정부가 직영하는 윤리센터의 일방적인 '간섭'에 무조건 따를 이유도 없다. 조사가 부실하다고 생각되거나,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기타 시간을 끌 이유가 있으면 소송을 걸면 그만이다, 또 한세월 어영부영 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요청한 234건의 징계요청에 대해 131건(55.9%)은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체육 단체들은 그리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 체육계에서는 윤리센터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추천문제, 징벌적 예산삭감 등 정부의 이런 '간섭'에 대해 맞서는 결기는 체육회장 선거에서 유리한 조건이 될 만큼 '간섭'에 민감하다.

물론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조직인데, 그 정도는 간섭, 즉 관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의 의무를 대행하는 체육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국가의 의무를 축소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체육계에 특별사법경찰을 두겠다는 논의도 제법 진척이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난센스다. 도대체 공권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발상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아래 생겨난 우회로가 "징계요청"이었지만 이는 누가 봐도 어설픈 구제 방안 아닌가?

인권침해 구제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전문성, 독립성, 신뢰성을 꼽을 수 있다. 전문성은 조사관의 권위와 관련된 것인데, 현재 조사관의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라면, 윤리센터의 조사관은 개인이 아니라 법률 또는 조사 전문가를 포함하는 팀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리센터는 징계대상자의 소송 여부와 별개로 조사관의 권위를 신뢰하고, 우선의 행정적 조치는 모두 취하는 피해자 중심의 구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독립성은 체육계는 물론이고, 문체부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를 낳는 문체부가 출자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 한계가 뚜렷하다. 체육계가 직접 출자하고, 스스로 징계권을 이양해 체육단체 통합형 윤리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양받은 징계 권한을 바탕으로 통합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목 불문하고 언제나 일관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독립성 보장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고는 조사의 전문성과 심의, 징계 조치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마지막 조건인 신뢰성을 기대하면 된다. 윤리센터가 최속현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겁안내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인권구제정책이란 것이 그렇다. 그 면면은 촘촘하고, 모든 대비가 잘된 듯 보이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런 게 있었어'라고 말하며, 그 누구도 '모르던 잣대'로 처벌하고, 꼬리를 잘라내는 기준으로 삼는다. 심지어는 정책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챈 자들이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서 체육계를 이끌고 있다. 혹 지금도 있었을지도 모를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절규는 오늘도 그런 가운데 묻힌다.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학원 아닌가요" ... 사각지대 속 신생 체육시설, 관리는 누가 하나

#. 리듬체조 선수를 꿈꾸는 딸을 키우는 A씨는 얼마 전 딸이 다니던 학원으로부터 갑작스레 수업이 중단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학원 측은 강사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당장 훈련을 이어갈 학원을 찾지 못해 걱정이다. 학원이 있는 관할 시청과 구청, 교육청에도 문의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리듬체조와 같은 정규 교과목 외 체육 종목을 교습하는 학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원업',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인 '체육시설업' 등에 모두 속하지 않아서다. 이에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3일 체육업계에 따르면 리듬체조, 폴댄스, 에어로빅 등 종목은 '학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더라도 학원법에서 정하는 학원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에 속한다.

교육청은 음악과 미술, 무용 등 학교에서 다루는 예체능 과목 관련 학원은 관리하고 있다. 학원업의 경우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고 수강료 상한, 안전관리, 행정처분 등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도 정해져 있다.

어린이가 많이 찾는 태권도 학원, 수영 학원, 체육대 입시학원 등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야 운영 가능하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안전관리 요원 배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시설 이용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

반면 리듬체조와 같은 정규 교과 외 체육 과목의 경우 이같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지켜야 할 기준 없이 국세청 등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관련 학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모호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업이 아닌데 학원 명칭을 달고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원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관리·감독할 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 규제 사각지대 보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학원뿐 아니라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유아 체육시설도 규제 밖에 있다. 영유아 가족이 많이 찾는 무인 키즈풀(워터룸)은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부분 공간 임대 사업자로 신고한 뒤 영업하고 있다.

일반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질 기준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유사 업종인 무인 키즈풀의 욕수 수질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맞게 CCTV(폐쇄회로TV) 안내문을 설치한 곳도 서울시내 무인 키즈풀 12개 업소 중 1곳에 불과했다.

양태정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겸 대한요가회 수석부회장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원업이 아닌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폴댄스 등 최근에 새로 유행하는 체육 시설들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도자 자격에 대해서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국금지' 황의조, 경찰에 분노 "부당한 과잉 수사로 3억 피해"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그간 출석을 지연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황씨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 통상 출국금지 기간은 한 달 이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측은 "지난 15일 황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며 "황씨 진술과 다른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하고 그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경찰에 대해 황씨 측은 "부당한 과잉 수사"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황 씨 측은 이에 반발, 지난 17일 '수사에 협조했는데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경찰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 측은 갑작스러운 출국금지로 예정대로 소속팀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추가로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해 분석한 뒤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압수한 물품은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5대와는 별개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첫 소환 조사 이후 출국한 뒤 (다시 수사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황 씨가) 2차 가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피해 여성 2명도 조사해 진술을 확보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교육청 '학교체육포털'서 대회·진학 등 학교체육 정보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0045200530?input=1195m>

국민체육진흥공단, '개도국 스포츠 발전회의' 열어

<https://www.mbn.co.kr/news/sports/4996922>

원주시, 시체육회 보조금 부당 집행 수사 의뢰키로

<https://www.fnnews.com/news/202401220813393913>

양구군, 대한체육회와 함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3026600062?input=1195m>

화성시, 다람산공원 다목적체육관... 오전6시~밤10시까지 운영 중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92280?ref=naver>

각목 부러질 때까지 폭행... 천안 대학 체육학과 가혹행위 수사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4/01/22/KS7EAWDP35DKPBU>

[S2TBNABFIL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4/01/22/KS7EAWDP35DKPBU)

눈보라 속 집단체육 북한의 체육정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4555_36523.html

대한산악연맹, '2023 체육단체 혁신평가' A등급으로 우수단체 선정

<https://www.stoo.com/article.php?aid=91348819092>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